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10(월) ~ 2022.1.14(금)

제공일시 2022 01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10(월) ~ 2022.1.14(금)

제공일시 2022 01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탄소국경세, 더 센 놈이 온다...철강·화학업계 어찌나

- 유럽연합(EU)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세(CBAM) 입법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EU 의회가 CBAM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기존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이었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외에도 석유화학 제품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다른 업종도 CBAM 적용대상에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대상품목 확대,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를 단축하는 특별보고관 법안을 추진중. 이렇게 되면 **유기화학물, 플라스틱을 CBAM 적용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생산공정에 사용된 전기 등 간접배출도 적용 대상. CBAM 발효시기도 기존 2026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고, 무료할당 폐지도 원래 10년에서 4년(2025~2029년)으로 단축될 전망**

(euractiv, 2022.1.11) Kira Taylor
<http://www.eu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eu-parliament-drafts-complex-overhaul-of-carbon-border-tax/>
(머니투데이, 2022.1.11) 최민경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2201111456855>

2. 에델만, ESG 지침 부합하지 않는 고객사와 '결별'

- 기후 활동가로부터 화석연료 회사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압박을 받아왔던 글로벌 PR회사 에델만이 60여일 동안 고객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끝에, **향후 ESG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고객사들과 결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음. 기후 활동가들이 이제 화석연료기업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돕는 PR회사와 법무법인 등까지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
- 지난해 11월 '클린 크리에이티브스'는 에델만에 #EdelmanDropExxon 캠페인을 벌임. 에델만은 330여개 고객사 중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20개 기업을 심층 조사하고, 기후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이나 데이터가 없거나, 넷제로(탄소중립) 목표가 없는 고객사와 결별 수순을 밟을 수 있음을 예고한 바 있음. 에델만뿐 아니라 맥킨지,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이 비슷한 압력에 처해있으며, MZ세대 직원들까지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 향후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임

(Edie, 2022.1.11) Sarah George
<http://www.edie.net/news/Edelman-drops-out-new-client-requirements-for-clients-drops-out-of-its-client-portfolio>

3. 빌 게이츠 기후펀드, 청정기술에 18조원 투자...탄소포집·그린수소 등 주력

-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만든 민간 합작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캐털리스트(BEC)' 펀드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에서 청정기술 프로젝트에 150억 달러(18조원)를 투자**할 계획. 이들 나라가 탄소 배출 제로(0)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임
- BEC가 투자하는 4가지 중점 분야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DAC),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 생산하는 수소인 그린수소, 지속가능한 항공유, 에너지 저장 기술. 특히, **BEC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 이 펀드는 마이크로소프트(MS), 블랙록, 제너럴모터스(GM), 아메리칸항공, 보스턴컨설팅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아르셀로미탈 등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지난해 9월 발표

(오피니언뉴스, 2022.1.11) 이상석 기자
<http://www.opini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2>

1. 사직서 인증샷·높기 운동...전세계로 번진 '안티워크'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10월, 18만 명이던 미국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의 **'안티워크(반노동) 커뮤니티 회원이 올해 초 16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 가능한 한 적게 일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데 관심을 쏟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
- 이곳에서 가장 크게 환영받는 글은 자신의 사직서를 찍은 사진. 최근 '안티워크' 회원들은 집단행동에도 나섬. 식품업체 켈로그가 파업 중인 공장 노동자를 대신할 인력 채용에 나서자 수천 건의 가짜 지원서를 내며 이를 방해
- 미국의 퇴사 물결은 숫자로도 확인. 지난해 11월 기준 퇴직자는 453만 명으로 2000년 12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 많은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FT는 아직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분석. **노동 거부 물결은 다른 국가에서도 확산.** 중국 밀레니얼 세대에게도 '높기(lay flat)' 운동이 유행처럼 번짐. 단순하고 덜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직장 경력 등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임

(한국경제, 2022.1.10) 이지현 기자
<https://news.naeur.com/article/newsapp/202201101255ae-202211>

2. 일본 '이온몰' 전국 매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 일본 최대 유통업체인 **'이온몰'이 올해부터 일본 전역 각 매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 발전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어 에너지를 매입하는 등 전력 사용 방식을 전환할 방침.** 각 매장에는 대형 축전지도 마련해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
- 이온몰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20억 킬로와트시(kWh)로 일본 전체 전력 소비의 0.2%를 차지. 소비자들과 가까운 대규모 유통업체가 모든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다른 기업이나 지역사회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온몰은 또 소비자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 가정의 태양광 발전 중 남은 전력을 전기자동차(EV)를 이용해 이온몰에 제공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로 환원해 주는 서비스도** 시작

(한겨레, 2022.1.11) 김소연 기자
<https://www.han.co.kr/international/govet/20220111.html>

3. 환경부,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 기준 세운다

- 환경부가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의 자격요건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는데, **1분기 안에 자격요건을 발표한 뒤 등록제까지 연이어 추진할 것으로 전망.**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기관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입장
- 회계법인은 2018년부터, 신용평가 3사는 2021년부터 녹색채권 인증사업을 해왔는데,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외부 검증기관으로 추가하게 될 수도 있어 경쟁자에 대해 바짝 긴장한 상태라고 전해짐. 환경부는 올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예산 15억원을 배정하고, 100건가량 지원을 예상하고 있음. 외부 검토기관에서 이를 수행할 조직체계와 평가 관련 시스템이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녹색채권 외부 검토(검증)시장이 관치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The bell, 2022.1.13) 이지혜 기자
http://www.thebell.co.kr/lec/content/446466a.asp?key=20221114553734410356&acode=00&page=1&cont=thebell_check_time

1. 한정에 장관 “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부진 기업엔 벌금”

- 환경부는 2022년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하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보급 목표를 올해 8~12%로 높여 잡고 내년부터는 미달성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힘. 벌금 규모는 상반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
- 보급목표는 최근 3년간 차량 판매수량이 연평균 4500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출고차량 일정 비율 이상을 무공해차로 보급케 한 제도로, 현대차와 기아는 12%,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은 8%를 적용 받게 됨
- 한편,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택스노미) 초안에 원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킨데 대해, 사회적 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내 적용에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입법안 채택 가능성과 관련, “EU가 무상할당비율 폐지를 더 빨리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한국경제, 2022.1.11) 김소현 기자

<https://news.sae.com/article/newspage/03/000453/02/02020112>

(머니투데이, 2022.1.11) 민동훈 기자

<https://news.mt.co.kr/news/mtview/03/000454/01/02020112>

2. 국민연금발 주주소송 조짐...재계 “소송폭탄 우려”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말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기구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해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복지부 개정지침이 처리되면, 앞으로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의 주주소송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
- 주주대표소송 제도가 있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국부펀드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자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함. 이에 한국경영자총회, 상장사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7개 단체는 반대 공동성명을 냄.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는 경제계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으며, 법적 근거와 경정권한을 국민연금법 등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힘

(머니투데이, 2022.1.11) 심재현, 최석환 기자

<https://news.mt.co.kr/news/mtview/03/000455/01/02020112>

3. 애플·아마존·구글, 친환경에너지 투자 나선다

- 한국 에너지·인프라스트럭처 전문 자문사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EIP)는 미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 개발·투자사인 다이오드벤처스와 합작법인 더그린코리아(TGK)를 설립. TGK는 국내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개발해 세계적 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 **TGK는 태양광·풍력 발전과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할 자회사를 각각 세운 뒤 해당 자회사를 통해 국제적 빅테크 기업들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
- TGK는 3년 내 국내에서 1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을 구축해 국내외 빅테크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전남지역에 국내 대기업과 함께 15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 및 충북 지역 사립대학교가 추진 중인 40MW 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업계에서는 **TGK와 세계적 기업의 협업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 아마존,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4곳이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구매량의 30%(25.7GW)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빅테크들이 상당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매일경제, 2022.1.11) 박창영, 강두순 기자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1/3933/>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10(월) ~ 2022.1.14(금)

제공일시 2022 01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넷제로 선언한 글로벌 금융사들, 삼림보호는 냉랭...캐노피 보고서

- 영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인 글로벌 캐노피(Global Canopy, 이하 캐노피)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포레스트500(Forest 500)' 보고서를 통해, 넷제로(탄소중립)를 약속한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리걸앤제네럴(Legal & General) 등 **글로벌 대형 금융사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삼림보호 활동에 무관심**하다고 밝힘
- 삼림보호, 특히 삼림 벌채 근절은 넷제로 달성의 핵심 전략으로 손꼽힘. 벌채는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많은 양을 흡수하는 숲을 파괴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캐노피에 따르면 벌채에 따른 탄소 배출은 전세계 배출량의 15%를 차지. 또 삼림보호와 재건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에 벌채를 막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 따라서,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삼림 벌채 근절에 글로벌 리더들의 목소리가 집중됐고, 실제로 전 세계 삼림의 85%를 차지하는 100여개 국가가 2030년까지 삼림벌채 중단을 약속
- 캐노피는 **금융사들이 기업 투자 제한 등을 통해 삼림벌채 근절에 금융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을 강조하며, 이들의 관련 실적을 2014년부터 추적해 매년 발표. 이번 보고서에서는 150개 금융사의 투자 실적과 350개 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급망에 대한 실적을 분석함
- 조사 결과, 150개 금융사들은 **삼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급망을 가진 기업에게 총 5조5000억 달러(6554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지만, 삼림 벌채 근절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150개 금융사 중 93개사는 삼림 리스크를 가진 공급망을 가진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삼림 벌채 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 이 중 블랙록, 리걸앤제네럴, 커먼웰스은행 등 22개사는 넷제로 선언을 했음에도 벌채 근절 약정 없이 관련 기업에 669억 달러(79조7000억원)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캐노피는 벌채 리스크가 가장 큰 4대 상품군인 팜유, 콩, 목재, 소고기에 대한 금융사들의 벌채 근절 정책과 약속을 5점 만점으로 평가. 그 결과, BNP파리바,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라보뱅크(Rabobank) 등 8개사가 3점을 받은 반면 블랙록과 리걸앤제네럴은 1점, 뱅가드는 0점을 받음. 5점 만점을 받은 금융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
- 기업 조사에 있어서도 **350개 기업 중 72%가 공급망에서 벌채 리스크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삼림벌채 근절에 대한 선언이나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난해 28개 기업이 삼림 벌채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다는 것. 하지만 이 중 11개 기업만이 벌채에 노출된 자사의 모든 상품에 대해 근절 선언을 한 것으로 조사돼 기업의 참여 의지가 더 요구되는 상황
- 무엇보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삼림에 거주하는 원주민이나 노동자들의 인권에 액션을 취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음**. 조사한 350개 기업 중 네슬레만이 삼림 관련 공급망의 근로자 권리뿐 아니라 토지분쟁 시 취득 및 개발 자제, 지역주민/원주민 대상 사전 동의 절차 수립 등 인권 증진 약속을 한 것으로 나타남. 캐노피는 **삼림 벌채는 기후 리스크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인권에도 큰 위협을 끼친다**고 강조. 숲이 개간되면 원주민과 지역주민들은 토지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잃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경제권과 환경권 등에 대한 권리가 무시되기 때문.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측면에서 기업과 금융사가 벌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캐노피는 주장

(RI, 2022.1.13) Dominic Webb
<https://www.responsibleinvestor.com/articles/forestry-impact-report-2022-01-13>
(Bloomberg, 2022.1.13) Tasneem Hanfi Brögger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1-13/bankers-making-egf-headline-but-ignoring-forestry>

- 캐노피는 삼림벌채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벌채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힘. 일례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삼림 면적을 가진 브라질 아마존에서 벌채가 지난해만 21% 증가해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 **다행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삼림 벌채 근절을 위한 규제가 지난해부터 확대되고 있음.** 영국은 지난 11월, 삼림 리스크가 큰 공급망과 거래하는 기업에 실사를 요구하는 법을 제정. 이에 따라 영국에 위치한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에서 불법적인 벌채가 발생하는지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또 유럽연합(EU)도 팜유, 콩, 소고기, 가죽, 목재, 종이 등 삼림 리스크가 큰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 미국도 이와 유사한 삼림 법안(FOREST bill)을 예고. 이 같은 정부 규제도 중요하지만, **벌채의 실제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사와 기업의 적극적인 액션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캐노피는 주장**
- 보고서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
https://forest500.org/sites/default/files/forest500_2022report_final.pdf